

# 건설동향브리핑

## 제539호 (2015. 12. 7)

### ■ 정책 · 이슈

- 건설 현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 건설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현황 및 개선과제

### ■ 경영 · 정보

-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와 위기관리의 통합 방안 모색

### ■ 경제 동향

- 11월 CBSI, 전월 대비 0.4p 하락한 89.5

###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통일 대비 북한 인프라 건설의 성공 키워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건설 현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sup>1)</sup>

- 건설 현장 특성 감안한 고용허가제(E-9) 운용 및 제도 간 도입규모 조정 필요 -

### ■ 건설 현장 외국인근로자고용제도 개요

- 건설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건설업 취업등록제(H-2)와 고용허가제(E-9)임. 전자는 주로 조선족 동포를 건축 현장에서 단기간 고용할 때 활용하고, 후자는 태국·필리핀 등의 근로자를 토목 현장에서 장기간 고용할 때 활용함.

<건설 현장 외국인력도입제도 개요>

구분	고용허가제(E-9)	건설업 취업등록제(H-2)
대상 인력	양해각서 체결한 송출 국가의 국민 (베트남, 태국 등 15개 국가)	외국 국적 동포(중국 등 11개 국가)
체류 및 취업 기간	취업 기간 3년(재고용시 1년 10개월 연장)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 가능
의무 고용 기간 유무	1년 단위 재계약, 사업장 변경 3회	고용 기간 및 사업장 변경 등 제한 없음
기본 임금 지급 여부	근로일에 대해 8시간 기본 임금 지급	기본임금 없음
대상 현장	법규상의 제한은 없으나, SOC 현장 등에 우선 배정(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법규상의 제한은 없음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내국인 고용 노력	7일 이상, 고용허가서 발급	7일 이상,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노동 관련법 적용	·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 관계법 적용 ·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 관계법 적용 ·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도입 제한 규모	1년 간 2,350명 도입(2014년)(누적 가능)	최대 55,000명(2014년)(누적 불가)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2013.

### ■ 고용허가제 활용 현장, 숙련 인력 크게 부족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5년 10월, 건설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E-9)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관련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 부수는 38부임.
  - 내국 인력의 수급 상황 : 숙련 인력 부족 71.0%, 비숙련 인력 부족 65.8%로 나타남. 2014년에 비해 부족 상황이 완화되었으나, 부족 상황은 여전히 심각함.
  - 기능 수준 : 한국인 기준(100) 평균 76.4임. 중국 85.0, 필리핀 84.3, 태국 81.4 등
  - 임금 수준 : 한국인 기준(100) 평균 72.1임. 중국 85.0, 조선족 80.0, 태국 73.3 등
  - 고용허가제의 장점 : ‘오지에서도 기능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가 가장 높은 점수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11월에 발간한 「건설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및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발췌하여 축약하였음.

- 고용허가제의 단점 : ‘동일한 건설업체의 현장 간 이동시 절차와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가 가장 높은 점수
- 2016년도 고용허가제 건설업 적정 도입 규모 : 평균 4,345.6명
- 고용허가제 실효성 제고 방안 : ‘동일한 건설업체의 현장 간 이동시 절차와 요건 간소화’, ‘재입국시 동일 사업장을 건설업에서는 동일 사업체로 규정’ 등이 높은 점수

## ■ 근로자의 잦은 이동 등 특성 반영해야 활용도 증가

- 동일 건설업체의 현장 간 이동 요건 완화
  - 현행과 같이 ‘공사 현장 종료, 혹은 특정한 공정 기간 만료’시에만 허용할 경우 겨울철에는 기온이 높은 남부 지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이동시킬 수 없고 개설된 신규 현장으로 전환 배치할 수도 없음. 건설 현장 인력 수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사 현장 종료, 혹은 특정한 공정 기간 만료’로 한정된 현행 근로자 이동 요건을 완화해야 함.
- 재입국시 ‘동일 사업장’이 아닌 ‘동일 사업체’로 배치 요건 완화
  - 현재 재입국시 ‘기존에 있던 현장’에 복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입국시 기존 현장이 폐쇄되거나 더 이상 인력 수요가 없을 경우 해당 업체는 동일 근로자를 도입할 수 없음. 따라서 ‘출국시 기존 사업장(현장)’이 아닌 ‘출국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던 동일 사업체(건설업체)’로 규정해야 함.
- 재입국시 연령 제한 완화
  - 현재 40세 미만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현장 경력을 쌓은 40세 이상의 근로자는 재입국이 어려워짐. 따라서 한국 근무 경험자의 재입국시 연령 제한을 완화(예컨대, 45세)해야 함.
- 2016년도 건설 현장의 고용허가제 적정 도입 규모 : 4,000명
  -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증원의 요구와 과도한 외국 인력 도입시 우려를 종합하여 상대적으로 내국인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낮은 고용허가제의 연간 도입 규모를 현행 2,35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고(+1,650명), 건설업 취업등록제의 도입 규모를 현행 5만 5,000명에서 5만 3,350명으로 줄이는(-1,650명) 방안을 제안함.

심규범(연구위원 · gbshim@cerik.re.kr)

## 건설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현황 및 개선과제<sup>1)</sup>

- NCS, 건설산업 직무수요 반영할 수 있어야 -

### ■ NCS,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

-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의 개발과 보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NCS에 대한 산업계 및 교육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표준으로 삼고자 진행되는 국책사업으로,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하여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체계(NQF :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와 연계되어 직업교육 및 대학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쳐 향후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됨.

### ■ 건설 분야는 모두 8개의 중분류로 개발

- 건설 분야 NCS는 건설공사관리,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도시·교통, 건설기계 운전·정비, 해양자원 등 8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 중 건설 분야를 대표하는 중분류 토목과 건축의 분류 체계는 아래 표와 같음.
  - 토목 및 건축 분야 NCS는 설계·감리 및 시공 직무를 중심으로 세분류가 구성되어 있음. 소분류 토목시공과 건축시공에 포함된 세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25개 전문공사업종 분류와 매우 유사함.

### ■ 건설기업 및 현장에서 요구되는 주요 직무 다수 누락

- 수주산업 특성상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모든 비즈니스가 프로젝트 '수주'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영업직군이 필수이며,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 비중과 중요도가 매우 높은 편임.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5년 12월에 발간한 「건설부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토목 및 건축 분야 분류 체계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무 대상
건설	토목	토목설계 · 감리	도로설계/공항설계/터널설계/교량설계/항만(해양)설계/상하수도 설계/하천(담)설계/지반설계/단지설계/철도설계/토목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토목시공	토공/지반개량/포장/수중구조물시공/삭도시공/케도시공/상하수도시공/보링그라우팅/철강재시공/준설/석축	기능공
		측량 · 지리정보개발	지적/측량/공간정보구축/공간정보융합기술개발(신규개발)	기술자
	건축	건축설계 · 감리	건축설계/건축구조설계/건축감리/실내건축설계	기술자
		건축시공	건축목공시공/조적미장시공/방수시공/타일석공시공/건축도장시공/철근콘크리트시공/창호시공/가설시공/수장시공/단열시공/지붕시공/구조물해체/강구조시공	기능공
		건축설비설계시공	건축설비설계/건축설비시공/건축설비감리/건축설비유지관리/배관시공	기술자/기능공

- 2000년대 이후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민간자본을 활용하거나, 대형화 · 복잡화되는 경향이 있어 영업직군에 대한 직무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건설 분야 NCS 분류 체계에는 이러한 영업 관련 직무능력이 전무한 상황임.
  - NCS가 기업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표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NCS 개발은 기업과 현장의 직무수요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서 출발해야 함. 그러나, 건설산업 분야는 직무 수요에 대한 시장분석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건설 현장 핵심 직무의 하나인 안전관리 직무가 건설 분야에 포함되지 않고 NCS 대분류 23번에 해당하는 환경 · 에너지 · 안전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데다 내용도 미흡함.
  - 건설 현장 안전관리 직무는 건설 현장 소장에서부터 건설기능인까지 모든 근무자에게 필수적인 공통 · 핵심 직무의 하나로서 건설 분야 NCS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내용도 건설기능공이 알아야 하는 작업안전 실무에 대한 직무능력이 필수적이나 개발된 건설안전 NCS에는 누락된 것으로 나타남.

■ NCS, 기업 및 현장 요구 사항 명확히 반영해야 활용도 제고 가능

- 건설산업은 인재 양성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산업의 직무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민간 개발주체를 구성,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종한(연구위원 · ljh@cerik.re.kr)

##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와 위기관리의 통합 방안 모색

-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위기 임박 상황 및 대응 비용 최소화의 시작 -

### ■ 해외사업 위기대응,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에서 출발

- 최근 해외사업에 대한 잠재 리스크와 미청구 공사액 증가로 산업 차원의 대응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임. 최근 3년(2013~15년) 간 공식적으로 노출된 해외사업 손실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면서 향후 재반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선제적 리스크관리는 위기 임박 상황을 줄여 손실의 현실화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국내 건설기업의 리스크관리체계는 이벤트성 관리 활동으로 위기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를 고려하고 있음.
  - 리스크관리와 위기관리의 통합 운영은 정보와 프로세스의 일원화를 의미하며 리스크 대응의 적시성 확보는 위기관리에 대한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음.
- 지난 50년 간 국내 건설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역량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위기 상황의 현실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전적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 개선은 필요함.
  - 리스크관리와 위기관리의 핵심 기능은 적시성의 확보로 관리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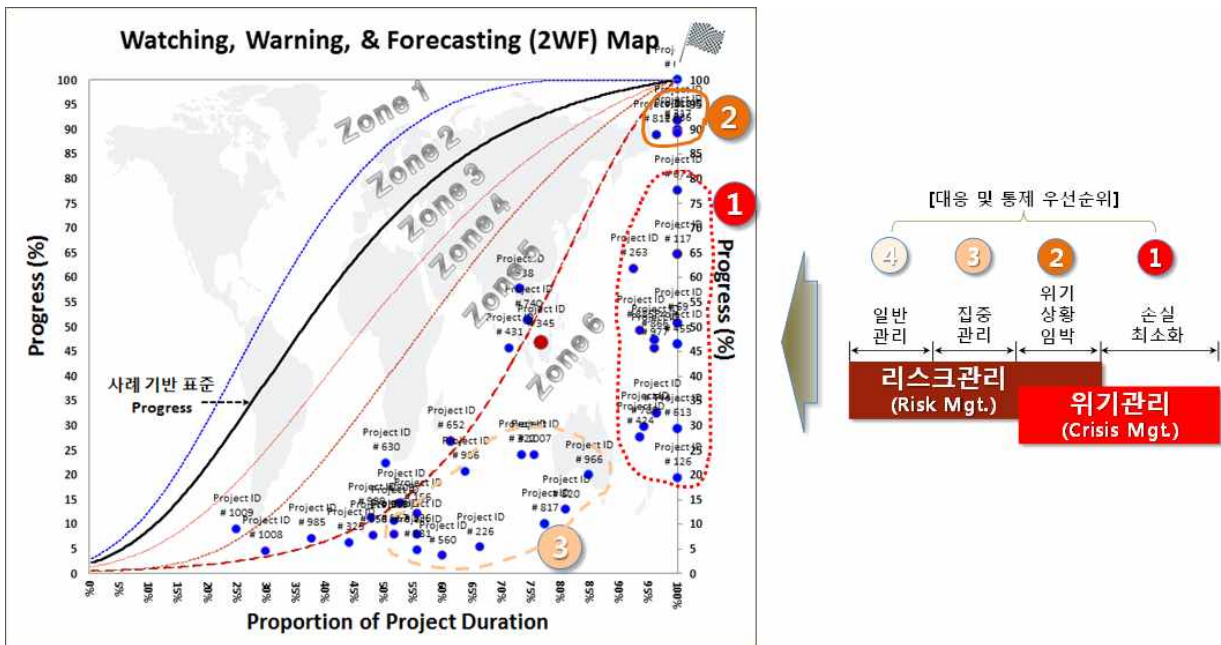
### ■ 기업 자체적 조기경보체계, 리스크 포트폴리오 관리와 경영전략 수립의 방향성 제공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5년 11월에 구축한 해외사업 잠재 리스크 조기경보체계(Risk-EWS)<sup>1)</sup>는 집중적 리스크관리가 요구되는 사업, 위기 임박 상황이 도래하는 사업,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대응이 시급한 사업을 분기별로 분석하여 기업의 리스크 포트폴리오관리와 경영 전략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함.
  - 최근 위기관리 대상 사업의 증가는 기존의 리스크관리체계의 실효성 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함. 계약 시점부터 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정적 잠재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되는 경우가 있지만, 손실 규모의 최소화는 위기관리 역량에 의존함.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5년 11월에 발간한 「해외사업 리스크 조기경보체계(Risk-EWS)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 최근 미청구 공사액이 증가하는 것은 특정 권역의 환경 변화, 유가 하락, 과도한 수주 확대 등이 일부 원인이지만, 위기 임박 상황에 사전 대응하고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역량의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함.
- 효율적 위기 대응 및 통제는 사업의 전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한 리스크 요인의 발자취 데이터(Trace Data)의 이력을 활용할 경우 효율적임.

<집중적 리스크관리(③)와 위기관리(①, ②) 대상 사업 현황>



■ 수익성 제고 및 수주 확대 전략 병행, 기업의 건전성 유지 지원

- 리스크관리와 위기관리의 통합 운영은 사업의 성과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신속히 제공하여 기업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지원함.
- 조기경보체계 기반의 리스크 및 위기 대응은 최근 발생하는 기업의 ‘회계 절벽’ 빈도를 최소화하여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도하고,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임.

유위성(연구위원 · wsyoo@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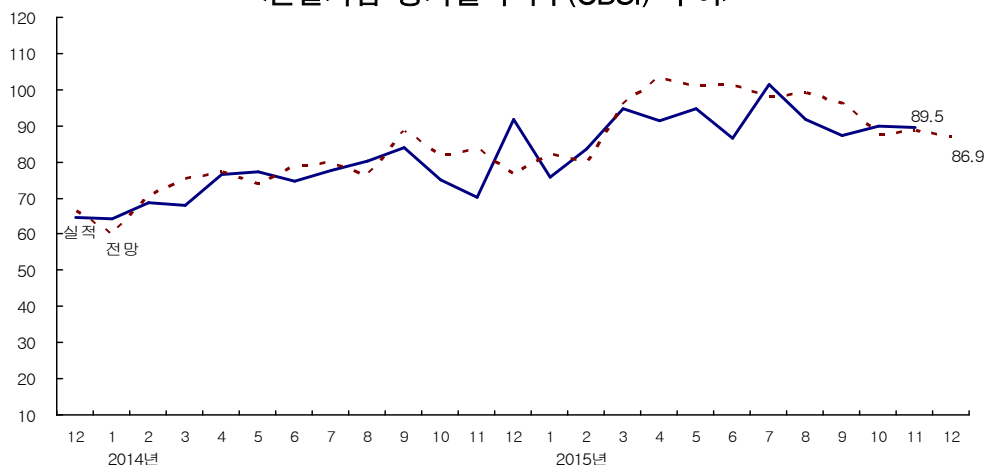
## 11월 CBSI, 전월 대비 0.4p 하락한 89.5

- 12월 전망치도 2.6p 하락, 비관적 전망 -

### ■ 상반기에 빠른 상승세 보이다가 8월 이후 조정 국면 지속

- 2015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sup>1)</sup>는 전월비 소폭(0.4p) 하락한 89.5를 기록함.
  - 올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 7월에 1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한 101.3을 기록했는데, 8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며 조정 양상을 나타냄.
  - 10월에는 전월비 2.7p 높아져 3개월 만에 다시 상승했으나, 11월 들어 다시 전월비 소폭 하락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함. 결국 8월 이후 4개월 연속 90선 주위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임.
  - 이는 상반기 상승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주택경기 호조세가 하반기 들어 신규 공급과잉, 금융정책 기조 변화, 시중금리 인상 등에 의해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SOC 예산을 늘렸지만 당장 건설기업 체감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때문으로 판단됨.
  - 실제로 11월 신규 토목공사 지수는 84.4로 전월비 2.0p 상승에 그쳤는데, 추경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공 토목공사 발주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 건설기업 체감경기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대형기업 지수 하락, 중견기업 지수 전월 수준, 중소기업 지수 상승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기업 지수가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대형기업 지수는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함.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비 7.7p 하락한 92.3을 기록하여 8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함. 이에 따라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연속하여 기준선을 상회하던 지수도 다시 100 이하로 하락함.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비 0.1p 상승한 102.9을 기록해 전월과 유사한 체감 경기 수준을 보임. 중견기업 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선을 상회한 것은 2009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중견기업 체감 경기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7.8p 상승한 71.1을 기록함. 지난 7월(80.9 기록) 이후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한 데 따른 통계적 반등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75.8	83.5	94.9	91.4	94.6	86.7	101.3	91.6	87.2	89.9	89.5	88.7	86.9	
규모별	대형	100.0	100.0	115.4	108.3	115.4	100.0	125.0	107.7	100.0	100.0	92.3	84.6	84.6
	중견	71.9	90.6	103.1	94.6	84.2	91.9	94.7	91.9	93.9	102.8	102.9	102.8	91.4
	중소	51.9	56.0	61.5	67.9	82.0	65.3	80.9	72.5	64.6	63.3	71.1	77.6	84.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12월 전망치, 11월 실적치 대비 2.6p 낮은 86.9 기록

- 2015년 12월 전망치는 11월 실적치 대비 2.6p 낮은 86.9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낮은 것은 건설기업들이 12월에는 건설 경기가 11월보다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연말에는 발주 물량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건설기업들이 12월 건설 경기에 대해 다소 부정적임. 이 역시 최근 주택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때문으로 판단됨.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1. 27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경제과 주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TF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li> <li>- 적격심사제 및 시공능력평가 개선 방안 등 논의</li> </ul>
12. 1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사회건설 종합대책 마련 전문가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li> <li>- 에너지·시설·SOC 관련 안전 영역 논의</li> </ul>
12. 2	건설공제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 지역 조합원 대표자 경영 연수'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참여</li> <li>- '향후 건설시장 전망 및 시사점' 강의</li> </ul>
12. 4	국토교통부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문화 대토론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주제 발표자로 참여</li> <li>- 주제 : Post 아파트 시대, 건축의 역할과 과제</li> </ul>

■ 「건설문화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대토론회」 주제 발표 참여

-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이 지난 11월 30일(월), 서울시 신청사에서 개최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및 건설문화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건설공사 참여자 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 발표하였음.
- 이날 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김종근 서울시 건설총괄부장, 김현성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음.

■ 「2015 서울시 도시 인프라 정책 세미나」 토론 참여

- 지난 11월 30일(월) 서울시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주최로 개최된 '2015 서울시 도시 인프라 정책 세미나(서울의 인프라 안전성능 실태진단과 정책방향)'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이 지명토론자로 참석하였음.
-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복남 서울대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신수봉 인하대 교수, 이유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등이 주제 발표하였음.
- 토론회에는 류중석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남궁은 명지대 교수, 박창근 관동대 교수, 한승헌 연세대 교수, 오봉수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하였음.

## 통일 대비 북한 인프라 건설의 성공 키워드

일각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통일비용의 규모에 대한 논란이다. 통일 비용은 기본가정과 추정방법에 따라 작게는 500억 달러에서 5조 달러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다. 이것이 바로 통일을 대비한 북한 인프라 건설의 리스크를 함의한다. 또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단계적 통일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이는 남북 간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통한 경제통합(‘본격적인 통일’이라 칭함) 전에 10년에서 20년의 체제통합의 초석을 다지는 기간(‘초석 기간’이라 칭함)을 두자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본격적인 통일 시기로는 대체적으로 2030~35년이 거론되고 있다. 2030년이라 가정하면 초석 기간 10년을 감안할 때 준비기간은 5년 남짓이다.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은 것에 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해 통일 대비 북한 인프라 건설에 대해 아직도 총론에 머무는 논의만 있고, 각론을 준비하는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또한, 통일 대비 인프라 건설에 대한 정부 내 거버넌스(Governance) 재확립이 필요하다. 즉, 국토교통부는 통일 준비위원회 조직 및 인력의 제한을 고려하여 북한 인프라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범정부 및 건설산업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 인프라 건설의 조사 및 연구 결과 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편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정책 목표에 부합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을 대비한 북한 인프라 건설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동시에 국토교통부는 약 290조원 투자사업의 성공적인 기획업무에 해당하는 ‘통일 대비 북한 인프라 건설 연구’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의 참여를 보장할 만한 연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및 선진 건설기업의 북한 인프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통일투자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써, 국민의 통일공감대는 조기에 형성되고 그 열기는 높아져, 통일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목표는 저절로 달성될 것이다. <건설경제, 2015. 11. 24>

이영환(연구위원 · yhleee@cerik.re.kr)